

이덕일의 '역사의 창'



삼균주의를 아십니까?

막바지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두 단어는 '부동산'과 '코로나19'일 것이다. 부동산과 코로나는 어느 모임에서도 단골 주제가 되었다. 졸지에 평생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 어렵게 된 사람들을 지칭하는 '벼락거저'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으니 이런 현상이 낯설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급 확대, 은행 대출 역제를 비롯한 여러 정책들이 나왔지만 이미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나고 있다.

있다. 강령 1조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같은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진 최고 조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반만년 계속된 민족공동체 최고의 조직체라는 얘기다. 강령 2조는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다. 삼균주의는 조소앙(趙素昂:1887-1958) 선생이 체계화한 것으로서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를 뜻한다.

나는 부동산 문제는 정책 이전에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지는 공기처럼 인간이 생산한 재화가 아닌데, 이를 개인이 독점적으로 그것도 영구히 소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다.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담긴 부동산 철학도 이런 의문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국강령'은 일제를 구축한 후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가 운영 방략을 담은 것인데, 여기에 획기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책이 담겨 있다. 1940년 9월 중경에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가 성립되어 한중 양국의 공동 항일전선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일제를 구축하고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한 때 발표한 '건국강령'은 임시정부가 집권했다면 곧 헌법과 법률이 되었을 내용이다.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복국(復國), 제3장 건국 등 22개조로 구성되었는데, 한마디로 광복 후 나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강령 3조가 바로 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國有)의 유법(遺法)을 두었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려는 토지혁명이다"라 되어 있다. 우리나라 토지제도는 국유제니 문란한 사유제를 국유로 환원하는 토지혁명을 실현하는 것이 대한민국 건국정신이라는 것이다. 배타적·독점적 토지 사유제에 익숙한 현재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의 균등은 토지구유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강령 7조는 "임시정부는 이상에 근거

하여 혁명적 삼균제도로서 복국(復國)과 건국을 통하여 일관한 최고 공리인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과 독립, 민주, 균치(均治)의 3종방식을 동시에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를 뜻하는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건국정신이라는 것이다. 한데 현재 우리 사회는 삼균주의 대신 소수가 권력을 몰아가며 차지하는 정치의 차별화,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경제의 차별화, 일부가 교육의 특혜를 독점하는 교육의 차별화라는 3차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해방 후 미소의 분할 점령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집권했다면 민족 구성원 개개인이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국가를 지향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공간(1945-1948)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은 물론 민족공동체 국가를 지향하던 한독당까지 제거된 후 두 친일 정당인 자유당과 한민당이 각각 여야를 이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불행한 헬조선이 만들어진 것이다. 헬조선의 탈출은 삼균주의에 입각한 국정 철학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맞서 싸우며 꿈꾸었던 파라도이스한국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생명과 온 재산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유지를 계승하는 길이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社說

시의회 '민원성 예산 끼워넣기' 선거용 아닌가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민참여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는 대신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대폭 키워 넣어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상임위는 최근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한 102억원(79건) 중 59%에 달하는 60억원(41건)을 삭감했다. 반영률을 기준으로 하면 41%에 그쳐 지난해 76%(89억 원 중 68억 원)에 크게 못 미친다.

보도 정비(2억 5000만 원), 신안동 스타벅스 주변 보도 정비(1억 원) 등 23건에 이른다.

각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20억 원을 비롯해 황룡강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보강 5억 원, 조대 공대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 5000만 원, 북문교차로 광주다운 길거리 조성 2억 원 등이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교통건설국 시민 참여 예산 49억 원(30건)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성 도로 개설·정비 사업비를 무더기로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은 입등 천변우로

시민참여 예산은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예산 편성 독점권을 막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매년 시민들의 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영된다.

이처럼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업들을 시의회가 무더기로 삭감한 것은 정책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이다. 게다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시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꼭 필요한 시민참여 예산은 반드시 되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방역 패스' 노인층 배려 절실하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의 하나인 방역패스 제도가 지난 6일부터는 전국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영화관·독서실·PC방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 노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7일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백신 패스' 확대 적용은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게 한해서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로,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정보가 연계된 QR코드를 찍어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음을 인증해야 한다. 지금은 계도기간이지만 오는 13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의무적으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고령층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역 패스 인증'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해도 1, 2차 접종 완료 및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음성임을 확인해주는 질병관리청 앱(COIV)과 같은 '전자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은 노인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중요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차와 2차 접종률이 각각 80% 이상 완료됐고, 3차(부스터) 접종도 하루 30만 명 가깝게

파라다이스한국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생명과 온 재산을 바쳤던 독립운동가들의 유지를 계승하는 길이다.

의료칼럼

턱교정 수술



정서린 조선대학교병원 치과교정과 교수

분들도 계산한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약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와 비수술 교정 치료의 경제성 상에 있는 경우 약교정 수술을 동반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비수술 교정 치료는 심한 주걱턱, 안면 비대칭, 무턱 등으로 인한 심미적인 불만을 개선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 차이가 심한 턱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치아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골격적인 부조화가 심한 경우는 약교정 수술과 함께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턱은 위턱보다 더 늦게까지 자라며,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늦게까지 자라는 경향을 보인다. 약교정 수술은 턱뼈의 성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성장이 남아 있을 경우 성장이 완료된 후 진단했을 때보다 치료 결과 예측이 어렵고, 치료 후 아래턱이 다시 나오는 재발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치료 결과의 안정적인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약교정 수술은 턱교정 수술이라고도 하며, 턱뼈의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수술을 말한다. 교정 치료는 턱뼈 내에서 치아를 이동시켜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 교정적인 치아 이동만으로 맞출 수 없을 만큼 위턱과 아래턱의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약교정 수술이 필요하다.

교정 치료를 상담하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약교정 수술이 안전한지, 부작용이 없는지 궁금해 하신다. 전신 마취 후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위치를 골절단술과 고정을 통해 개선시키는 수술인 만큼 위험성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임상 경험이 풍부한 구강 악안면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고, 수술 전에 마취에 대한 여러 검사를 미리 시행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약교정 수술 직후에는 입술과 얼굴이 많이 부을 수 있는데, 곧 부기가 가라앉고 나면 얼굴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3D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수술에 대한 3차원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치료 계획을 반영해 약교정 수술에 사용할 장치를 보다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른 치료 결과 또한 매우 정확하고 안정적인 편이다. 약교정 수술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으로 주저하기 보다는 직접 치료에 대한 현재 본인의 구강 악안면 영역의 기능적·심미적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 약교정 수술을 시행한다면,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환자들은 주로 교정 치료 의사에게서 처음 약교정 수술의 필요성을 듣게 된다.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상담 후 방사선 사진을 통한 뼈에 대한 분석, 위아래 치아들의 본을 떠서 하는 치아 공간에 대한 분석, 안모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고, 이 자료를 분석하는 진단검사를 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 환자분들에 대한 더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치료 계획에 대한 장단점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먼저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선수술 교정은 안모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단 과정에서 선수술 가능 여부를 평가해 봐야 한다. 약교정 수술은 단순히 얼굴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위치로 이동한 뼈와 함께 새로운 위치로 움직이게 된 치아의 맞물림 및 턱관절의 운동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때 교정 의사와 구강 악안면 외과 의사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먼저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선수술 교정은 안모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진단 과정에서 선수술 가능 여부를 평가해 봐야 한다. 약교정 수술은 단순히 얼굴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위치로 이동한 뼈와 함께 새로운 위치로 움직이게 된 치아의 맞물림 및 턱관절의 운동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때 교정 의사와 구강 악안면 외과 의사의 긴밀한 협조 하에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약교정 수술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느껴서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 치료만으로 개선 효과를 얻고자 하시는

약교정 수술 시기는 턱뼈의 성장과 관련이 깊다. 아래

기고

무등산 자동차 운행 주장을 중단하라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운영위원

무등산은 접근성이 어렵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무등산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바로 도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광주 지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산, 매년 350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찾아오는 산이 바로 무등산이다.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탓에 무등산은 국립공원 중 북한산 다음으로 탐방객이 많아 탐방로 훼손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무등산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무등산의 탐방로 자연휴식년제, 탐방 예약제 등을 통해 탐방객을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산을 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 차량을 이용해서 빠르고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을 무등산 정상으로 실어 나르겠다는 것은 무등산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는 일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원호사-장봉재 구간의 도로는 현재 탐방로로 지정돼 있다.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탐방로를 도로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국립공원 환경 훼손과 안전 등을 이유로 차량 운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차량 운행시 비산 먼지로 인한 탐방객 피해와 안전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이는 무등산의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은 도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휴식처이자 담배, 샴,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이다. 광주지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무등산은 이제는 고층 빌딩들에 가려 정상부만 간신히 볼 수 있는 실정이다. '숲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등산 주변부를 중심으로 개발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고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압력이 무등산 정상부를 향해 올라오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원호사-장봉재 구간의 도로는 현재 탐방로로 지정돼 있다.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탐방로를 도로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무등산국립공원 환경 훼손과 안전 등을 이유로 차량 운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차량 운행시 비산 먼지로 인한 탐방객 피해와 안전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이는 무등산의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0년이 다가오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 후 수립된 무등산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 계획에서는 무등산국립공원의 주요 과제로 정상부 군부대 이전 및 복원, 통신시설 이전 및 복원, 외래 식물 조립지 복원, 군사 통신 시설 도로 복원이 제시되었다. 10년 동안 무등산 생태 복원을 위한 과제들이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평가해야 하는 시점에 이미 시민들이 반대한 전기차 운행이 또다시 논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전남대 무등산권관광사업단과 지오컨버전션 연구센터, 광주관광협회가 주관한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보전과 이용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접근성 부족이 무등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장봉재로 접근을 위해 트램과 산악 열차가 제안되었고 당연한 순서인 것처럼 원호사-장봉재 도로를 이용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운행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등산은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동차 운행이 아니라 보전과 복원이 더 필요하고 시급하다.

無等鼓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